한중 관계 복원에 FTA 협상 타결… 李 대통령 '외교 성과'

일본 총리-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中과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타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0분 간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선전국제교류센터(ICSZ)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제33차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짧게 환담을 나눈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회동하는 등 미·중·러 정삼회담을 앞두고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의 일정을 진행하며 사이사이 주요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소화하는 등 외교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16~17일 이틀에 걸쳐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필리핀, 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17일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신뢰를 쌓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 흐름을 조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어질 한일 간 셔틀외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던 협력의 축적과 선순환을 통해 한층 더 발전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갈 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한일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양국 정상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 화남지역 한국인 오찬간담회, 에이펙 CEO 서밋 연설에 이어 시진핑 주석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19일엔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구축'란 비전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에이펙 구성원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는 ▲한중관계 전면 복원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더 성숙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인적 교류 확대와 양국민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 측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2015년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4년 넘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8년8개월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상대국 기업의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다.

일각에선 한류를 제한하는 소위 '한한령'이 전면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영업에 도움이 되고 중국 관광객의 소비 증대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은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사실 콘텐츠 부문에선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을 마친 후 푸틴 대통령과 약 10분 간 회동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푸틴 대통령과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서 "한러 관계가 여러 여건 상 쉽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 협력 여지를 찾아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자는데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며 "한반도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긴장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다음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쟁에 발목… 반도체법 등 민생법안 '표류'

민주유공자법 놓고 국힘 필리버스터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34건에 달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지연 전략을 펼쳤다. 여야가 연일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 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은 개별법으로 예우를 하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처럼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도 의료지원 등의 예우를 갖추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고, 범여권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한 22대 국회, 이재명 정부에서 재추진됐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을 심사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며 "현행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민주화 사건에는 수 많은 경찰들이 희생된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희생된 경찰공무원분들과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동등하게 예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대학입학전형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이 대입 특별 전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대입 관련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천준호 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화운동으로 장애를 얻은 유공자에게 국가가 의료 지원하는 것이 문제인가. 목숨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희생을 예우하는 것이 문제인가. 국민의힘이 남발하는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화의 결실"이라며 "이러한 법안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는 스스로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계류돼 있는 법안은 총 34건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합의를 거친 안이다.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계류 법안은 쌓이고 있다. 정기국회 막판 법안 심사를 거치며 계류 법안은 늘어날 예정이다. 여야 정책위원회가 공통 발의 법안을 신속처리하겠다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쟁점 법안 탓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에는 중요 법안도 눈에 띈다.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김태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도 본회의 문턱 앞에 와 있다.

/박태홍 기자

대법원, 한덕수 혐의 일부 무죄… 파기환송

민주당 비상 의총·혁신당 촛불집회

대법원이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적어도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계획을 선포 당일 밤에 알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게 해 계엄 선포를 재고하도록 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에 서명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과 나머지 혐의의 죄수 관계를 고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여권은 대법원판결 이후 비상 의원총회와 촛불집회 등을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조국 혁신당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이동해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민주당 정보통신특위 출범… AI 안전 논의

김민석 "AI 악용 방지, 정책의 책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이미 AI(인공지능)가 우리 삶에 들어온 현실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또 정치와 정책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 인사말에서 "AI가 주는 편의뿐만 아니라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일상이 그야말로 시작이 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특별위원회는 디지털안전법을 통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든가, AI를 활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침 오늘 첫 회의도, AI 해킹, 개인정보 유출 대응 현황 점검, 그리고 AI글라스(안경),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기술 현황 점검 등 아주 시의성 있게 해주시는 것으로 들었다"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우리가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당의 가장 선도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